

# “농업 R&D 예산, 스마트팜 풀림 종자산업 육성 세부방안 모색”

**송미령 농식품 장관 기자간담회  
스마트농업 예산 집중 정책 지원 부족  
전문가 우려, 종자산업 지원 강화 필요  
카이스트와 협약 융복합 인재 양성  
농업 R&D 예산 조정 종자산업 촉진**

정부는 그간 농업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스마트팜에 치우쳐 왔다고 보고, 농업의 근간인 종자(씨앗) 산업 육성에도 다시 초점을 둘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라 불린다. 제일 기본”이라며 “전문가들이 종자산업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경기 포천에서 열린 한농촌의료서비스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농업·스마트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R&D 예산도 대부분 디지털 스마트농업 예산으로 상당한 풀림 현상이 생겼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해 오던 종자산업 쪽에 관심을 덜 두고 정책적 지원 등을 다소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농업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향후 농촌진흥청 및 민간 육종가 등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서 이와 같은 R&D, 인재양성 등을 위해 카이스트와 협약을 맺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송 장관은 “카이스트에 농학과 등은 없다. 하지만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장관. /농식품부

도, 자체적으로 대학원 프로그램을 바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4월쯤 MOU(업무 협약)를 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농업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융복합 인재양성을 카이스트와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농축수산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늘 있어 왔던 얘기”라며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직 없다”라고 전했다.

다만 “우리 국익, 우리 농업인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불이익 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원칙은 고수하겠다. (또 중요한 점은) 대응함에 있어 신중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포천시 가산면을 찾은 왕진버스(농촌의료서비스)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 수를 지난해 9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까지 늘렸다”며 “공공이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천은 수도권에 있고 상황이 좋을 거다 생각했었는데, 도농 통합시 여도 중심지에서 떨어진 면 지역이 사각지대인 것 같다”고 했다. 또 “부산·인천 등지에서 의사들이 봉사하러 왔다. 미용실 하는 분들도 하루 시간 내어 왔다”며 “할머니들이 네일아트 받고 손톱 색깔 자랑하시는데 참 기분이 좋았다”고도 전했다.

또 왕진버스 등의 시책이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도 확산시킬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 농촌봉사서비스 모델을 각 지역 농협, 지역 의료원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남 지역에서 최근 확산한 소 구제역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발생지역이 영암하고 무안인데 2곳 발생은 서로 역학 관계가 없었다. 혈청이 같긴 하지만 2개가 연결돼 있지 않다”며 지역 간 전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확산 방지에) 상당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제역이 크게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캠퍼스타운 1000개 창업기업 육성

서울시, 서울 소재 20개 대학 대상 AI·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 집중 발굴

서울시는 올해 서울 소재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캠퍼스타운사업에 약 1000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7년 시작한 서울캠퍼스타운사업은 서울시와 대학, 자치구가 함께 청년 창업가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과정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 9년간 서울 소재 39개 대학이 참여해 총 3321팀의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등 1만3954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업기업 1000개 팀을 육성해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 및 인재를 육성한다. 각 대학별로 입주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서울 지역 대학 창업시설의 50%를 차지하는 캠퍼스타운 창업지

원시설을 통해 창업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미래 경제산업의 먹거리이자 혁신적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를 비롯해 ICT·로봇, 바이오, 창조산업 등 첨단 원천기술을 보유한 우수대학 자원이 원활하게 창업을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대학 창업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체 1000개 육성 기업 중 교내 창업 기업을 40%인 4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교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 시설 입주 조건을 완화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생 및 교수, 연구원과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 대학 우수 인적 자원의 기술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 전국 의대생 21일까지 휴학계 반려

결원은 편입학 충원 검토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제출한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음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제적되며 발생하는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총협은 긴급회의를 열고 객관적 사유 없이 동맹 휴학에 동참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전북대와 조선대가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반

려한 가운데, 나머지 38개 대학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총협은 합의사항을 통해 2025학년도에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등의 처분도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제적될 경우 생기는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홍순 교육부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대의 결원”은 소수이긴 하지만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

## 한전, 부하차단 제도 통해 전력비 2000억 ↓

**고객참여로 발전제약 완화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한국전력이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시행해 작년 하반기 구입전력비 2000억원을 절감,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운영한 ‘고객참여 부하 차단 제도’를 통해 약정량 700MW(메가와트)를 확보했다.

‘고객참여 부하 차단제도’는 전력계통 고장으로 주파수 하락 시 한전과 사전에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긴급 차단해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전력계통 안정화 제도다.

한전은 계약유지 및 부하차단 시 정전 리스크 감수에 대한 보상으로 연 1회 운영보상금(1320원/kWh)을 지급하며, 실제 부하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영업손실에 대해 동작보상금(9만



한국전력이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시행으로 2000억원을 절감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했다.

8400원/kWh)을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

이 제도는 또 기 설치된 변전소를 활용함으로써 투자비가 추가로 들지 않고, 시행 즉시 발전제약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동·서해안 지역 발전 제약이 약 1.5GW(기가와트) 완화됐으며, 저비용 발전기를 추가로 운전하게 돼 지난해 7월~12월까지 약 2000억원

의 구입전력비를 절감했다. 향후 매년 약 4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구입전력비 절감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해 국민부담을 완화했고,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했다”며 “계통운영 측면에서는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방지에 따른 안정성을 제고해 광역정전을 예방하고 재생에너지 수용성도 향상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의 경영성과와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한국의경영대상’에서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를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편, 한전은 22.9kV(킬로볼트) 이상 전용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 산업용 고객을 대상으로 제도 가입 고객을 추가 모집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온실가스 감축기’ 기술 끌어올린다

환경부, ‘다배출 연구개발 협의체’ 출범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민·관 연구개발 협의체가 출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서울모처에서 ‘온실가스다배출 산업 연구개발(R&D) 협의체’를 발족하고, 출범 일인 이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온실가스다배출 업종을 대표하는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 및 17개 기업, 환경기술 전문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향후 이어질 회의에서는 ‘국가온실가

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최신 탄소중립 기술시장 정보 공유를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업종별 필요 기술 논의, 민관 협력 기술개발 과제 발굴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적용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 파악에도 나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술은 ‘환경연구개발 혁신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구체적인 사업 기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우주에 9개월간 체류한 우주비행사 2명, 드디어 무사 귀환  
▲트럼프, 민주당 추천 FTC 위원 2명 해임… “불법적 해임”  
/사진 뉴시스

▲중왕이, 佛에 “소통 강화 필요… ‘정글의 법칙’은 안돼”  
▲트럼프·푸틴, 부분 휴전 합의에 日 “계속 주시… 러 긍정 대응 기대”

▲주한 이스라엘 대사 “가자 군사활동 재개 불가피”  
▲이란, ‘가자 공습 재개’ 이스라엘 규탄… “인종 청소 지속”